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입찰부적격업체 나라장터 투찰 절대 불가

조달청, 5월중 모든 전자입찰공고에 시행

나라장터에서 입찰 부적격업체의 투찰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 부적격자 사전 제어시스템 구축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모든 전자입찰공고의 투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부적격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입찰자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사전에 전자입찰서 제출이 차단된다.

또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자진반납 등 행정처분과 사업자 휴업, 폐업 정보 등에 의한 입찰참가도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일부 부적격업체가 행정처분 정보 등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자료 및 나라장터와 각종 정보보유기관에 연계된 등록말소 및 폐업 등 각종 부적격자료를 이용해 투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조달업체는 만약 나라장터 시스템에 표시된 업체 정보가 사실과 다르

면 정보제공기관에 요청해 정보 갱신을 요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스템 적용시기가 도래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달업체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상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접속 →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 출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3D 건축기법(BIM) 적용 확대

2010년 토탈 서비스대상 500억 원 이상, 턴키·설계공모 건축공사 BIM적용 의무화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입체형 설계와 생애주기를 반영하는 고품질의 건축기법(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BIM은 건축설계를 2D에서 3D로 한 차원 격상시키고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공공시설 분야에 BIM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Total Service 건축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총사업비검토

등 전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otal Service란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청사, 전시관 등 공사를 기획에서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대행하는 제도로 작년 한해 2조9천억원(72건)의 사업을 수행.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도서관, 대전지방경찰청 등의 공공건축물이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 시설공사에 BIM이 도입되는 경우 설계과정에서부터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못된 설계를 수정할 수 있고 설계 변경요인이 줄어들어 공기가 단축되고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의 에너지 소모량, 설비의 교환시기 등 각종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BI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 분야의 BIM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공공발주에 BIM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관련지침을 제정·운영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BIM을 시범 적용한 바 있으며 국방부, 용인시, LH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발주한 사례가 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건축·기계 등 전문가로 BIM발주를 전담할 팀을 구성하여 실무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BIM발주지침을

【조달청 추진 계획】

- * 금년에는 1~2건의 대형공사에 BIM을 시범적용하고 내년에는 3~4건으로 확대한 뒤 2012년부터는 Total Service 대상 500억원 이상인 터키·설계공모 건축공사에 BIM적용을 의무화한다.
- * 3D모델의 작성기준, 납품기준 등 세부적인 발주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Best Practice를 제공한다.
- * 설계사 및 건설사의 BIM 초기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정비한다.
- * 장기적으로 모든 건축공사에 BIM을 적용하고 다른 시설조달 분야로 확산한다.

조기에 마련하는 등 BIM이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SCO, 녹색성장동력 산업으로 진화

지경부, 7월까지 에너지절약산업 발전방안 마련

지경부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를 녹색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세계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지절약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25일 에너지절약 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ESCO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에너지절약 시장 선점을 위해 ‘에너

지진단·컨설팅, ESCO, 효율개선 설비를 포함한 에너지절약 산업 발전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올해 세계 ESCO 시장이 1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연평균 22%씩 성장하며 세계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중국은 연평균 33%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ESCO 시장은 1950억원 규모로 대부분 정책자금 용자(70%)이며 민간 자금을 의한 시장은 6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등 전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어 국내 ESCO가 전문성·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진출까지 가능한 절호의 기회”라며 “ESCO를 비롯한 에너지절약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냉·난방, 단열개선 등을 포함한 정부청사의 ESCO 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 이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사용 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지경부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확산됨에 따라 에너지효율 부문에 2030년까지 10조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실장은 “작년 12월 코펜하겐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2012년에 300억 달러의 재정지원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기금조성을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투자가 급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ESCO 업체는 정부 ESCO 용자확대와 ESCO 전용 공제사업, 인력양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파주시 256억원 투입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파주시가 256억원을 투입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집중 추

진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규모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3대전력 9대 중점방향 59개 과제를 선정해 녹색생활의 실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수목원 조성사업에 이르기까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녹색성장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56억원을 편성했다.

또 103억원을 투자, 쓰레기 소각열 에너지를 재생해 LGD에 공급하는 폐열 재활용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문산행복센터 등 공공청사 6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LCD 폐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주택 보급, LED 조명 교체사업, 자유로변과 신도시 등 6개소에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시민 개인의 녹색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민실천운동에 중점을 두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자동차 매연 저감사업과 그린카 보급사업 추진을 통해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 남은 상수도관
2014년까지 모두 교체**

서울시는 1984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2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교체 대상 상수도관의 94.5%인 1만2852km를 스테인리스 강관 등 내식성관으로 바꿨다. 올해에는 934억원을 들여 89km를 정비하고 나머지 651km는 2014년까지 전량 교체할 방침이다.

노후 상수도관이 교체되면 누수 피해가 적어지고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음수집센서 등 최신 누수 탐지장비를 도입해 지난해 5561곳의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등 지하 누수관 탐지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수도 유수율(생산량 대비 요금수입이 발생하는 수량)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92.9%를 기록했다.☉